

정상 회담을 계기로 본 한·미 통상 관계 전망

崔仁範*

한미정상회담의 결과

최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의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담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었고,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진정한 의미의 첫 문민정부이고, 미국으로서는 12년만에 집권한 민주당 행정부이어서, 양국 모두가 무엇인가 새로운 정책으로서 변화를 추구하는 행정부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주로 안보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졌었고, 이는 최근의 북한 핵문제에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몇 가지 경제문제가 논의되었음은, 양국간 관계에서 경제문제가 그 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경제현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략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다자간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하여 양국이 함께 노력하고 적극 협조할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미국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동경에서 열렸던 G-7 정상회담에서 일본, EC, 캐나다와 시장접근문제에 대한 타결을 보아 우루과이라운드의 연내타결 목표달성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그 여세를 몰아 일본과 한국 등이 농산물 분야 개방에 있어서 일보 양보하도록 설득하여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급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번에 합의된 부분은 8개 공산품(의약품, 의료장비, 건설장비, 철강, 농업장비, 맥주, 가구, 증류주)에 국한되어 있고, 협상의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는 섬유, 전자제품, 목재, 제지 및 펄프 등의 관세 인하 내지는 철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으며, 금융 및 서비스 분야에서도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했다. 더욱이 UR협상의 가장 큰 난제인 농산물 시장개방 문제가 미해결 상태이므로 앞으로 제네바에서 전개될 협상의 진전내용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의 연내 타결 가능성이 좌우될 것이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초기부터 동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따라서 이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재개됨에 따라 협상의 전분야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조지타운대 경제학박사, 국제무역정책 전공.

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측에 전달한 것이다. 다만, 쌀 등의 기초식량의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입장인 것이다. 물론 미국은 한국의 쌀시장 개방문제에 대한 정치·경제적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한국에 대해 쌀시장개방의 예외를 인정해 줄 경우 다른 나라에게도 그들이 갖고 있는 특수한 사정에 따른 예외를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유무역 확대를 지향하는 UR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서 쌀시장 개방문제에 대한 한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측은 그동안 한국의 수출증대를 통한 급성장 과정에서 한국이 자유무역체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수혜받은 국가이며 이에 따른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협상은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로 남아 있을 것이며, 쌀시장 개방문제는 한·미간의 가장 골치아픈 통상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지역경제협력을 위하여 아태경제협력기구(APEC)를 활성화 하는데 있어 한·미 양국이 공동 노력하자는 제안을 미측이 해온 것이다. 미국은 다가오는 11월에 시애틀에서 개최 예정인 APEC 각료회담 직후 APEC 회원국의 정상들이 참여하는 「경제회의」를 열어 아·태지역의 경제협력을 좀더 돈독히 해보자는 제의를 하고 있다. 미국은 APEC 회

원국간의 무역자유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차적으로는 회원들간의 무역투자포괄(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APEC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APEC 각료회담을 정상회담으로 승격시킬 경우 중국, 대만, 홍콩 등 3 개의 중국에 대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아시아권이 중심이 되어 APEC을 활성화 시키자고 주장하는 말레이시아 등의 ASEAN 국가들이 얼마만큼 미국의 제안에 협조할 것인가가 미지수로 남아있다. 미국으로서는 아·태지역에 경제블록이 형성된다면, 그것이 미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유럽공동체(EC)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권 형성에 미국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측의 입장을 적극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더 나아가 아·태지역의 경제협력기구를 보다 발전시켜서 이 지역 안보와 경제를 함께 연계시킬 수 있는 「신 태평양공동체」의 창설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로는, 한·미 양국의 쌍무적 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보다 긴밀한 경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미 경제협력 대화(Dialogue for Economic Cooperation; DEC) 기구의 창설에 양국이 동의한 것이다. 이 기구의 창설목적은 국제교역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므로 양국간에 좀 더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양국간 교역량을 증가시키고 통상현안을 보다 부드럽게 해결해 나

간다는 데 있다. 특히 양국이 경제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우선 자국의 규제완화조치 계획을 일단 작성하고, 그에 따라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제의하고 서로 상대방의 규제완화가 요구된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이 협의체를 운용하기 위하여 우리 외무부와 미 국무부의 차관보가 각각 대표가 되는 최고 협의체를 두고 그 산하에 필요에 따라 특정한 이슈에 관한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토록 되어 있다. 현재 계획으로는 오는 8월에 우선 협의를 시작하여 12월말까지 양국의 규제완화 및 경제협력 현황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다. 사실 이 협의체는 지난 92년 1월에 열렸던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서 추진되어 왔던 한·미기업환경개선방안(Presidents' Economic Initiative; PEI)의 성과를 양국이 긍정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그와 유사한 형태의 경제협력 및 대화기구를 만들자는 데 양국이 동의함으로써 시작된 것이다. PEI에서는 표준, 통관, 투자, 기술 등 4개 분야에 있어서 협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그중 표준과 통관분야는 양국 공동권고안의 이행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으나 투자 및 기술분야에서는 양국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어왔다. 투자분야에 있어서는 미측의 불만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PEI를 통한 한국내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이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미측은 개방의 폭확대, 자금조달 기회의 확대, 외국인 토지취득규제의 완화, 투자절차 간소화 등의 문제를 그동안 지속적으

로 요구해 왔다. 반면, 기술분야는 우리측이 제기하여 PEI에 포함된 분야로서 기술실무회의의 구성에까지 합의했으나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제시되지 못함에 따라 아직까지 실질적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미측은 정부예산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러한 PEI의 추진내용을 살펴 볼 때, 앞으로 DEC에서 논의될 분야는 주로 외국인 투자관련 분야와 기술이전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클린턴 행정부의 통상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이러한 세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경제문제가 다루어졌을 뿐, 회담내용이 경제문제 또는 통상현안에 그다지 집중되지 않았다. 물론 그것은 최근 한미 경제관계가 상당히 원만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한미 경제관계는 한국의 대미무역수지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고 양국간 기업환경개선방안(PEI)의 좋은 성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의 대미무역수지는 1987년에 9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이래 계속 감소되어, 1991년 이후에는 대략 균형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대한수출이 증가된 반면 우리의 대미수출은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정체 내지는 감소된 데 기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한미 양국 간에는 아직도 통상마찰의 소지가 다분히 남

아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측은 무역수지의 균형이 유지된다 하여 통상관계가 자동적으로 원만해 진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물론 우리측은 대미무역수지가 적자까지로도 반전된 상황에서 미측이 지나친 통상압력을 계속 가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측은 아직도 한국내 외국기업의 영업환경이 매우 나쁘고, 지적재산권, 통신, 쇠고기 시장개방 등 현안문제의 타결도 결코 쉽지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미측은 기타 국제기준에 합치되지 않는 통관, 검역 등 높은 2차적 혹은 간접적 무역장벽이 존재하는 등, 한국은 아직도 시장개방의 확대 및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산재해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더욱이 클린턴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에 다소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의 주요교역국 중 하나인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도 함께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클린턴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퍼 301조의 부활 및 강화가 실현될 경우 미국의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는 국가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조치 등이 예상되는데, 이와 함께 미국에 대량수출되고 있는 우리의 주력수출품에 대한 덤핑판정 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클린턴은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사찰강화와 세금증과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미국에 직접투자를 한 우리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며, 국방예산의 대규모 삭감 계획

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우리측 부담 증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우리정부에게는 예산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클린턴은 그동안 태평양 연안국가의 조선보조금을 무역불공정행위라고 비난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주요 조선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클린턴은 보다 철저하고 엄격한 환경관련 규제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우리상품의 대미수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현재 미국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연비효율제고법이 통과되고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 허용치가 보다 엄격해 질 경우 국산자동차의 대미수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환경관련 규제는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수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환경관련기술의 수출을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어 부통령은 적극적인 환경보호론자로서 앞으로 미국의 환경정책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클린턴대통령은 미국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교역상대국의 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시장개방을 위한 대한통상압력도 다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미 통상현안 중 미측의 주요관심분야인 금융시장개방과 지적소유권 보호문제에 있어서 대한통상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개방에 대해서는 제3단계 금융자유화 계획이 과감한 내용을 포함할 것과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보다 철저하고 엄격한 단속과 처벌강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벤슨 재무 장관은 불공정무역국에 대해서는 미 행정부가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하며 수퍼 301조의 부활을 주장하는 인물이므로, 앞으로 금융시장 개방문제가 가장 중요한 한·미 통상현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클린턴행정부가 대외통상압력을 가중시킨다면, 그 주요목표는 한국이 되기 보다는 일본과 중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클린턴은 강경한 대외통상정책과 관련하여 한국을 직접 거론한 적이 없고, 주로 일본의 대미무역흑자와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문제 등을 지적해 왔다. 더구나 최근 한미통상관계는 비교적 원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양국간 무역수지도 대략 균형을 이루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하면(표 참조), 앞으로 한·미 통상관계를 너무 불안한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표 1>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별 무역수지 추이

(단위 : 10억 달러)

연 도	일 본	한 국	중 국	대 만	E C
1988	-51.8	-8.9	-3.5	-12.6	-9.1
1989	-49.0	-6.2	-6.2	-13.0	1.5
1990	-41.1	-4.1	-8.4	-11.2	6.3
1991	-43.4	-1.2	-12.7	-9.8	16.7
1992	-49.4	-2.1	-18.3	-9.4	8.8

자료 : 미상무부

한편, 클린턴 행정부의 출범으로 인한 미국의 경제정책변화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 만약 미국이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통상압력을 가하여 일본과 중국의 대미수출에 지장이 온다면, 이것은 오히려 우리상품의 대미수출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만약 클린턴의 경기부양책이 성공하여 미국경기가 되살아난다면 이에 따라 우리의 대미수출이 증대될 수 있는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미 양국간에 무역수지 불균형은 최근 수년간에 걸쳐 상당히 시정되어 이제 대략 균형된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균형상태는 교역량 팽창을 통한 확대균형이 아닌 축소균형 추세이다. 한·미간의 총교역량은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상가격으로 볼 경우에도 1989년의 332억 달러에서 점차 감소추세를 보여 1992년에는 313억 달러 수준에 머무르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일본, 중국, 대만 등의 대미무역량 증가추세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대조적인 것이다.

<표 2> 미국의 아시아 무역상대국별 수출입 추이

(단위 : 10억 달러)

	일 본		한 국		중 국		대 만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88	37.7	89.5	11.2	20.1	5.0	8.5	12.1	24.7
89	44.6	93.6	13.5	19.7	5.8	12.0	11.3	24.3
90	48.6	89.7	14.4	18.5	4.8	15.2	11.5	22.7
91	48.1	91.6	15.5	17.0	6.3	19.0	13.2	23.0
92	47.8	96.5	14.6	16.7	7.5	25.7	15.2	24.6

자료 : 미 상무부.

이러한 한미간의 교역량 감소추세는 양국 모두에게 바람직 하지 못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수출구조도 상당히 변화되어 북방 및 아시아 국가에 대한 수출이 증가되고 우리 수출의 대미의존도는 1988년의 35%에서 1992년에는 24% 정도로 하락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미 양국간의 교역량 증가를 위해서 양국은 무역협조문제를 적극 논의해야 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관세인하 등의 시장개방 정책으로 외국으로부터의 경쟁을 허락해야 함과 동시에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기술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아시아지역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함과 동시에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동반자로 설정하고 양국간 산업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미국의 고도기술 및 자본 등과 한국의 생산능력 등을 결합하여 양국간 산업협력이 이루어 질 경우, 한미양국은 일본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으며, 그에 따라 아시아 시장 및 세계시장에 공동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한·미 경제관계가 주로 몇 가지의 상징적인 통상 현안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즉 쇄고기나 쌀시장개방 등 양국간 무역규모에 있어서 그다지 큰 부분이 아닌 통상현안이 부각됨으로써 양국간에 통상 마찰이 있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양국 모두가 이러한 일부 통상현안문제에 집착하기 보다는 좀더 포괄적이고,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한미경제관계를 재정립해 나가는 것이 양국의 무역 및 경제성장을 위해서 바람직 할 것이다. ♣

“새로운 동반자 관계는 다음 네 가지의 기본 원칙을 전제로 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적인 가치의 공유, 한국 안전 보장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의지, 긴밀한 경제 유대 관계, 지역적·국제적 외교에 있어서의 상호 협조 공조 체제이다.”

- 조앤 스페로, 미국무성 경제 농업 담당 차관보, 1993년 6월 14일 제6차 한미재계회의에서 -